

지방자치·국제

상임위서 삭감된 내년도 광주 예산 83억원

예결위서 얼마나 살아날까

6일부터 진행...삭감예산 부활 기대

광주시가 편성한 2011년도 본 예산 가운데 83억4300여만원이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됐다. 광주시의 내년 예산 총 규모 3조279억원의 0.3% 수준에 불과하지만, 시의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이처럼 많은 액수가 깎이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과거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산결산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부활되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고려할때 '엄격한 심의'를 공언해왔던 시의회의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 지 주목된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2010년 본 예산의 경우 상임위에서 32억원이 삭감됐지만, 예결위 조정(안)을 통해 12억원이 되살아났다. 2009년도 마찬가지로 삭감되었지만, 예결

위에서 6억원이 다시 살아났다. 특히 제6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도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예산이 예결위에서 부활해 '들쭉날쭉' 예산 심의라는 지적을 받았었다. 당시 산업건설위원회가 구체적 사업실행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전역 삭감했던 광주시 폴리디자인사업비 5억원이 예결위에서 슬그머니 부활됐다. 또한, 예결위에서 삭감됐던 지역아동센터 지원비 6000만원과 참전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1억6000만원이 본회의에서 전역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따라서 오는 6일부터 열리는 예결위에서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의 부활을 배제할 수 없을 것

으로 보인다. 더구나 광주시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한 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삭감된 사업예산에 대한 자료보안 등을 통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얼마나 많은 액수가 다시 되살아날지 관심이 쏠린다. 한 시의원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원칙이나 일관성 없이 삭감된 예산이 부활하거나 상임위에서 통과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삭감되는 것은 예결위와 상임위 사이에 충분한 이해와 소통이 결여된 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우 예결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되 해당분야를 심사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 예산의 전반에 걸친 사안과 상임위에서 논란을 빚은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재심을 통해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재활용 쓰레기 분리합니다”

광주 북구청은 1일 청사 회의실에서 새마을 부녀회원, 환경미화원, 사회단체 회원,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쓰레기 원천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주민결의대회를 가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현직 도의원 친목단체에 매년 5000만원?

전남도 선심성 예산 편성 논란

동우회 운영비 금지에 연구 사업비 명목 편법 지원

전남도가 전·현직 도의원 친목단체에 매년 수천만원씩 '선심성' 예산을 지원해 문제가 되고 있다. 가뜰이나 열악한 재정 형편에 현안 사업에 산가지 줄이는 상황에서 예산의 결핵권이 있는 '의회 뭉개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남도는 '2011 전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영산강사업이 전남 발전에 미치는 효과 연구' 명목으로 민

간경상보조금 5000만원을 책정했다. 이 예산은 전남도의회 전·현직 의원들의 친목단체인 의정동우회 몫으로 편성된 것으로, 전남도는 지난해의 경우 '전남도 자치단체별 도농교류 및 투자유치 발굴 책자 발간', 올해 '전남도 지역축제 마케팅 및 산업화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5000만원씩 책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이들 사업은 전문가를 활용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한데도

박사급 연구원은 커녕 상근 직원조차 없는 의정동우회에 사업을 맡긴다. 전남도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기관으로 전남발전연구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 뭉개주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게다가 전남발전연구원은 영산강연구센터를 이미 구성,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도도 "행정안전부가 의정동우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금지하고 있어 '전남도 의정동우회 지원조례'에 따라 운영비 명목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사실상 편법 지원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지난 2004년 서울 서초구 의정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감사원도 지난 2007년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의정회 보조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결국 전남도는 이같은 선례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업비 명목으로 우회적 보조를 해온 셈이어서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이 앞장서 '편법'을 조장한 것이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사실은 이날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의 전남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의회 감사위원(북포4·민주)이 '영산강 사업 연구'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지희기자 dok2000@kwangju.co.kr

진보교육·소통 부재·일방적 업무 질타

장학국 시교육감 상임위 이례적 출석...적절성 논란도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일 장학국 시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교육감의 서류제출 미비로 두 차례나 심의를 지연시킨 이유를 질타했다. 시의원들은 아울러 무상급식 등 장 교육감의 진보교육 정책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직원들과의 소통 부재 등을 지적했다. 진선기 의원(민주·북구 1)은 질의를 통해 "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며 "예산안 심의가 늦어진 데 대한 교육감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장 교육감은 "취임 이전에 예산이 편성됐고 전일 교육감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다"며 "자료미비로 예산안 심의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고 답변했다. 일부 시의원들은 무상급식 등 장 교육감의 진보교육 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소통 부재와 일방적 업무 추진에 대해 질타했다. 박인화 의원(교육·광산)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안정과 지속이 필요한데 장 교육감이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하면 교육계 일부가 소홀해질 수 있고 반발을 살 수 있다"라며 진보정책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정성 의원(민주·남구 2)은 "학교 시설 개선과 학력격차 해소, 보건 체육활동 분야의 예산이 많이 깎였다"라며 "무상급식이 필요하지만, 시교육청 자체 예산보다는 자치단체와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선기 의원은 "혁신학교 관련 예산이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

은 상태에서 공모한 것은 4대장 사업 추진과정과 다를 바 없다"며 "특히 시의회의 사전동의 없이 장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혁신학교를 추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현에 의원은 "관행적으로 내년도 예산안(부실하게) 제출돼 안타깝다"며 "교육감과 시교육청 직원들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교육감이 시교육위원회의 출석해 예산심의를 받은 적은 있지만, 시의회 상임위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교육감의 이날 출석은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의회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요구해 이뤄졌다. 이날 교육감의 상임위 출석에 대해 의회사무처리규칙상 '출석대상 공무원'에 교육감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실무적인 세부 예산항목까지 교육감에게 묻는 것이 과연 실효가 있는 것인지 적절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정은, 11월초 포격 준비 지령”

日 아사히신문 보도 "반년간 수만 군사훈련"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이 지난달 초 이미 군에 연평도 포격 준비를 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의 이름으로 지난달 초 '적의 도발 행위에 언제라도 반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는 지령이 북한군 간부들에게 하달됐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연평도 포격에 대해 북한군 관계자가 "예정됐던 행동이다. 충분한 기간 준비해왔다"

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북한군은 김정은의 명령을 받고 한국군에 대한 공격 기회를 찾고 있었으며, 한국군의 사격훈련을 구실로 포격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 신문은 추정했다. 이 신문은 또 "북한 내부 상황에 정통한 북측의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군 내부에 김정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어 '강력한 지도자'라는 이미지의 확립을 서둘 필요가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북한이) 군에 대한 단속책으로 1일부터 향후 반년간에 걸친 이례적인 군사훈련을 전군에 걸쳐 실시한다는 정보도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90년대 北서 3차례 쿠데타 시도”

위키리크스 파문 확산

북한 내부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쿠데타 시도가 벌어지는 등 혼란을 겪었다는 첩보들이 있었으며, 화폐개혁 실패 이후 김정은으로의 후계 이양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등 혼란이 가중돼 온 것으로 30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에서 드러났다. <北, 1990년대 3차례 쿠데타 시도 적발> = 주한 미국대사관이 지난 2월 28일 미국무부에 보고한 외교 전문에 따르면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같은 달 3일 한국 내 북한 전문가 5명과 만났다. 전문에 따르면 이날 익명의 한 전문가는 "1990년대에 3번의 쿠데타 시도가 있는 후 김정은은 매우 엄격한 통제 정책을 시행했고 쿠데타에 조금

이라도 연루된 사람은 누구든 처형함으로써 미래의 음모자들에게 단호한 경고를 보냈다"고 말했다. <MB정부 "남북관계 동결 감소 각오"> = 주한 미대사관은 지난해 1월 12일 국무부에 보낸 외교 전문에서 남북관계가 신속하게 개선될 전망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은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인택 통일 "北 붕괴시 韓·美가 통일 추진해야"> = 외교 전문에 따르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7월 평양 담당 차관보와 만나 김정은 사후의 북한은 지금까지는 매우 다른 것이라며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할 경우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신속히 한반도 통일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Hwasun Iris Park' (화순 이리스파크) featuring a large house and a map of the development. Text includes '특별한 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and '푸른숲 전원주택을 만나보십시오.' Contact info: HYUNJOUNG INDUSTRIAL DEVELOPMENT INC | TEL 062-385-1013·1014

Advertisement for 'Hong Space' (홍스페이스) furniture store. Features images of dining tables, a bed, and a sofa. Text includes '엔틱 - 100% ITALY 다기능 좌탁', '클래식 - 100% ITALY', and '세미모던 - 100% ITALY 사또닥스'. Contact info: 서구 화정동 307-1 화정동사거리 구, 안기부 대로변 푸조전시장 400평 062-382-0022